

<서식1>

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	중대재해처벌법상 '인과관계' 판단 기준 (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중심)		
신청부서		대검찰청 형사3과	담당공무원	채성진
연구방식		1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위탁형 용역 2.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연구형 용역 3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문형 용역		
연구기간		2022. . ~ 2022. . (6개월)		
예산 규모	항목	1. <input type="checkbox"/> 포괄 연구개발비 2.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별 연구개발비		
	예산금액	금 삼천만원 정(₩30,000,000)		
계약방법		수의계약		
연구의 필요성 (긴급한 사유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안전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제정·시행되었음 ○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 및 국내 실무례 등 연구 필요 		
연구의 중복 검토결과		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: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검색 ② 중복 여부: 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다		
연구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입법 경과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정 과정에서의 관련 법률안(인과관계 추정 등) 비교, 입법 관련 논의 자료(국회 회의록, 공청회 자료 등) 등을 통한 입법 경과 분석 ○ 안전사고 관련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판례 정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를 판단 인자 별로 정리 ○ 안전사고로 인한 형사책임 성립 요건으로서 인과관계 판단기준 관련 외국 입법례 및 실무례 연구 (독일, 미국, 영국, 일본 등) ○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 개념의 판단 인자 및 입법적 개선 필요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과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판단 인자 정리 (안전·보건 확보 의무 내용, 경영책임자의 지위·신분, 재해 유형 별 개별적 판단 인자 정리) -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인과관계 개념의 입법적 개선 필요성 등 제언 		
연구결과 활용방안		○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및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		